

## 정치적 자유주의와 모두스 비벤디: 국제정치의 불량국가 담론에 관한 연구\*

민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 〈국문요약〉

이 논문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시대적 변화와 정치철학적 논의가 오늘날 '불량국가'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색한다. 특히 자유주의처럼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불량국가' 담론의 배경에 깔려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적 구조가 어떤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라는 절충적 해법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주의 및 정치적 현실주의의 이론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문제를 자유주의와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고, 이어 그 기반을 형성해온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를 롤즈의 주장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비판을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에 '모두스 비벤디' 개념이 이러한 논란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모두스 비벤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논란이 자유주의 불량국가 담론과 더불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언급한다.

\*주제어: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현실주의, 불량국가, 모두스 비벤디

## I. 들어가는 말

정치의 본질에 관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라는

\* 논문의 개선에 도움을 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077).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mail: byomin@ewha.ac.kr)

가치를 보장하는데 최고의 이데올로기이자 제도로 간주되어 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자유주의는 모든 이념과 제도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자의 지위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국제정치에서도 자유주의 질서는 냉전 기간 내내 굳건하게 유지됨으로써 미래의 방향타처럼 간주되어 왔고, 지금도 견재하다. 하지만 탈냉전기의 상황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위상을 크게 흔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정치적으로 서구와 다른 체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자유주의 체제가 과연 최선의 모델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커졌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등장이나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동원체제가 산업화와 발전전략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국제정치의 차원에서는 냉전기 동안 유지되어온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한 제도와 협력 구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 등 다자주의적 장치들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심지어 국가가 아닌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이 커지면서 유럽의 경험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보편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 강화된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적 경향과 ‘악의 축’ 및 ‘불량국가’ 담론은 전통적 자유주의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대단히 비(非)자유주의적 또는 반(反)자유주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 또는 불량국가들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강압적 행태와 무력 사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해왔다. 정치철학 분야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현실 정치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그동안 정치학에서 등한시해온 정의와 도덕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는데, 논쟁이 지속되면서 롤즈의 입장은 ‘정치적 자유주의’로 분명한 노선을 확립하게 된다. 특히 그의 ‘무법국가’ 담론은 부시 행정부의 ‘불량국가’ 담론과 거의 유사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정치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시대적 변화와 정치철학적 논의가 오늘날 ‘불량국가’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색한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은 자유주의처럼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불량국가’ 담론의 배경에 깔려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적 구조가 어떤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

라는 절충적 해법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주의 및 정치적 현실주의의 이론을 비교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문제를 자유주의와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고, 이어 제3장에서는 그 기반을 형성해온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를 롤스의 주장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이어 제4장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비판을 다윈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에 ‘모두스 비벤다’ 개념이 이러한 논란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모두스 비벤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논란이 자유주의 불량국가 담론과 더불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언급한다.

## II.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한계

1990년대 이후 미국 외교정책에서 ‘적(enemy)’ 개념을 규정하는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악(evil)’의 개념과 ‘불량국가(rogue states)’ 담론이 교차 또는 결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교정책에서 ‘적’을 규정하는 일은 자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구조화함으로써 폭력적인 대응도 정당화하는 효과를 겨냥한다. 이런 의미에서 ‘타자(others)’의 ‘일탈(deviance)’을 체계적인 수사로서 강조하는 것은 각국의 외교정책에서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미국은 탈냉전기에 들어와 새롭게 부상하는 외부의 위협을 개념화하였는데,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악’과 ‘불량국가’ 수사를 통해 타자에 대한 낙인을 찍기 시작했다.

사실 1990년대 이전에도 미국 외교정책은 ‘기피국가(pariah state)’나 ‘무법국가(outlaw state)’ 등 타자에 대한 다양한 낙인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 ‘불량국가’라는 수사를 대규모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적에 대하여 강력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개념화 작업을 통해 미국은 테러리즘이나 대량살상무기(WMD)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선제공격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도 지속적으로 ‘악의 축(axis of evil)’ 담론과 ‘불량국가’ 수사에 의존해왔는데, 여기에서 ‘악’의 개념은 본래 종교적 맥락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악’의 개념과 ‘불량국가’의 개념이 모두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 행위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절대적인 부정의 상징인 ‘악’의 개념에 대비하여 ‘불량국가’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적을 ‘불량국가’라고 칭할 경우 무력 대응의 대상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봉쇄나 평화공존, 경제제재 등 한층 완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Geis et al. 2014, 466).

미국 외교정책에서 불량국가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된 적은 없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속성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리즘, 군사적 위협,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 이 중에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은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중시되고 있다(O’Reilly 2007, 297).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은 어떻게 해서 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인식될 수 있었을까? 근대 이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와 같은 ‘악’ 또는 ‘불량국가’ 담론은 미국과 같은 자유사회가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유주의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대외적 활동무대가 확장되면서 국가들 사이의 관계, 즉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자유주의의 우월성이 널리 인정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불량국가 담론은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되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정의(justice)’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불량국가’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겨냥하여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Michael Pompeo)는 미국이 처한 도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소위 ‘미국주의(Americanism)’를 주창하면서 이란, 중국, 북한 등의 ‘불량행동(rogue behavior)’을 언급한 바 있다.<sup>1)</sup>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의 현안들을 고려할 때 미국 행정부가 이와 같은 과거의 ‘불량국가’ 담론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미국의 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중간선거 등 국내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량국가’ 담론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여전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불량국가’ 담론에 대한 관심이 다

1) US Department of State, “Celebrating Americanism in Our Foreign Policy,” Speech by Secretary Michael Pompeo, August 27, 2019.

시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21세기의 국제정치는 이러한 자유주의 기반의 불량국가 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일방주의 또는 패권주의 외교정책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불량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Homolar 2010; Caprioli et al. 2005). 그렇다면 불량국가 담론을 가능케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왜 세계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어떤 이데올로기나 제도보다도 우월하다는 논리에 어떤 내적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자유주의의 불량국가 담론에 내재된 논리를 들여다보면,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의 작동 원리와 규칙을 수립하고 그것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있어야 할 터인데, 이는 당연히 자유주의 사회일 것이라는 전제가 불량국가 담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정치의 자유주의 논리와 국제정치의 자유주의 논리가 정합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 하에 다음 장에서는 자유주의 외교정책의 대외적 레토릭을 떠받치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논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 III. 정치적 자유주의와 불량국가 담론

#### 1. 중첩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자유주의

롤즈의 정치철학은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의'의 기준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도덕적 정치 구조를 가능케 해주는 형식적 도구들을 정비하는데 결정적인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1971년 발간된 그의 『정의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서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게 되었고, 롤즈는 1993년 『정치적 자유주의』를 발간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재정비하였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이 형이상학적 도덕론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유토피아(realistic utopia)'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awls 2017, 32). 롤즈가 이처럼 자신의 정의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 현실에 대

한 고찰, 특히 '가치 다원주의' 상황에 대한 고찰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역할이 컸다. 그는 포괄적 교리 또는 도덕적 신념체계가 복수로 존재하는 현실 정치로부터 어떻게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것이다.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는 모든 가치 또는 포괄적 교리를 통합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인다. 즉 다양한 가치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체계'로 통합하기란 불가능하며, 이들 사이에 비교도 어렵다고 본다.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가치가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이고도 보편적으로 최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포기한다.<sup>2)</sup> 따라서 기존의 포괄적 교리들, 즉 다양한 종교나 도덕체계에서 주장하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비판한다(McCabe 2010, 25).<sup>3)</sup>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이 특정한 포괄적 교리를 지지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가치 다원주의의 현실을 수용한다. 그에 의하면, 합당한 다원주의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부득불 '판단의 부담(burdens of judgment)'을 지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포괄적 교리'에 따라 다른 구성원들의 포괄적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경향 또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존중한다는 의무감은 곧 서로 다른 포괄적 교리, 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근본 교리조차도 존중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도덕적 또는 종교적으로 포괄적 교리들이 복수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중첩적 합의'를 꼽는다. 서로 다른 교리를 추종하는 사회 구성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소속된 사회의 기본 제도에 대하여 합의한다면 이는 '정의'를 위한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가 통약불가능한(incommensurable) 포괄적 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 
- 2) 가치 상대주의가 초래할 사회적 협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종의 '중층적 다원주의(layered pluralism)'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기도 한다(Moore 2009, 254). 이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소수의 집단으로부터 협력이 시작된다면 도덕적 의무나 강압적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점진적으로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를 둔다(Axelrod 1984, 167-168).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다원주의가 상대주의나 주관주의(subjectivism)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치 다원주의에서는 객관적 이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약요건 또는 선택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McCabe 2010, 25).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미, 가치, 목표가 대부분 상충되거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로 다른 교리 또는 신념체계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가릴 수 있는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서로 충돌하는 관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중첩적 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중첩적 합의는 보편적 원칙과 제도적 장치, 즉 사회의 ‘기본 구조(basic structure)’를 통해 정치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포괄적 교리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포괄적 교리와 호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한다면 이러한 중첩적 합의는 가능하다. 즉 각자의 신념체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신념체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도덕적 합의라는 난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첩적 합의는 차이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달하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롤즈는 중첩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자유주의가 ‘올바른 이유(right reasons)’에서 정치의 ‘정당성(legitimacy)’와 ‘안정성(stability)’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원리라고 보았다(Rawls 1993, 394).<sup>4)</sup>

그런데 여기에서 롤즈가 헌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정치체도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존속할 수 있는 ‘안정성’을 꼽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첩적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은 현실 정치적 합의를 넘어서는 ‘규범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으로 이어졌다. 롤즈가 보기에 사회통합이 단지 이해관계의 수렴이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왕과 귀족, 중산층 사이에 집단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회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본 홉스(Thomas Hobbes)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비판했는데, 이는 정의에 관한 ‘합당한(reasonable)’<sup>5)</sup> 관념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4) 롤즈는 시민들의 합당한 덕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중첩적 합의’의 개념에 비하여 ‘모두스 비벤다’는 일시적 이해관계에서 만들어진, 즉 ‘옳지 않은 이유’에서 비롯된 합의라고 보았다.

5) 롤즈는 합당성(reasonableness)의 개념이 합리성(rationality)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합당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이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열망하며, 이러한 상호성이 유지됨으로써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Rawls 2016, 142). 이러한 개념은 공리주의에 기반을 둔 합리성의 개념과 다른 일종의 ‘공적 기준’을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그의 신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롤즈가 보기에, 인간은 홉스 이후 수백 년에 걸쳐 민주주의 사상과 헌정 질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정치제도를 만들어왔다(Rawls 1999, 422). 이런 점에서 그는 ‘중첩적 합의’의 관념이 그 규범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의 환경 속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정의’에 대한 합당한 정치적 관념을 기반으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념은 20세기 후반 이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근간을 형성해왔는데, 롤즈는 1999년 발간된 『만민법』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국제정치학의 영역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확대는 그동안 현실주의 정치이론이 지배해오던 국제정치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탈냉전기 이후 미국 외교정책과 더불어 9/11 테러 이후의 공격적인 일방주의적 전환에도 큰 기폭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악의 축’ 레토릭과 ‘불량국가’ 담론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냉전 시기의 미소 간 대립 구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인데, 특히 ‘불량국가’ 담론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국내정치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배하는 최종적인 기준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즉 자유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한 공격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이어졌는데,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논거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를 제공한 것이다.

## 2. 롤즈의 모두스 비벤디 비판과 불량국가 담론

이상과 같이 롤즈의 ‘중첩적 합의’ 개념은 가치 다원주의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 자유주의의 도덕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공적 이성을 갖춘 합당한 시민들은 이러한 중첩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 상황에서도 정당하면서 안정적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지였다. 이런 점에서 중첩적 합의 기반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임시적인 타협책을 뜻하는 ‘모두스 비벤디’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롤즈에 따르면, 모두스 비벤디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 특정한 원칙이나 관행에 합의하는 경우로서, 근대 유럽의 종교적 관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

중시하고 있다.



종류의 합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종교 간의 차이에 대한 합의가 단기간의 평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상황이 바뀌어 특정한 종교가 지배할 경우 이러한 합의는 곧바로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모두스 비벤디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폭넓고 사려 깊은 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의적인 타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롤즈는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오로지 '현상유지(status quo)'만을 목표로 하는 모두스 비벤디보다는 한층 더 진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중첩적 합의'에 따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Martin 2015, 589).

그렇다면 롤즈의 중첩적 합의 개념이 국제사회에는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을까? 그가 『만민법』에서 전개한 논리에 따르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자유사회와 '적정 수준의 사회'로 이루어진 '질서정연한 사회' 구성원들 간에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합의가 작동하며 그 결과가 '만민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롤즈는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5가지 유형의 사회 또는 국가를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무법국가(outlaw states)'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무법국가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가리킨다.<sup>6)</sup>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침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심각한 정도로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를 무법국가로 규정했다. 이러한 무법국가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만민법이 설정한 합당한 제약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 롤즈가 '이상적 이론(ideal theory)'에서 그렸던 '만민사회'는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자유사회', 그리고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사회(decent society)'로 구성된다. 이에 비하여 무법국가는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행위자일 수는 있지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당한' 행위자는 아니다.

이러한 무법국가에 대하여 만민법을 준수하는 '만민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6) 롤즈는 그의 『만민법』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서 '국가' 대신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인간의 삶을 증진하는 데 있어 국가가 매우 미흡한 정치체라는 그의 사회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그는 유독 '무법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단위체로서 국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무법국가에 대한 이와 같은 롤즈의 대응논리는 ‘정의의 전쟁(just war)’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롤즈는 ‘질서정연한 사회’에 적용되는 만민법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정의론을 ‘비이상적(non-ideal) 이론’이라고 불렀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무법국가에 대하여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비이상적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무법국가에 대한 자유사회의 전쟁 권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준수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자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국민의 인권도 존중하는 사회만이 정당한 전쟁을 치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물론 롤즈는 인권에 대한 존중 이외에 실제로 무법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국가의 무력 사용이 정당하면서도 항구적인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무력 사용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전쟁 결정에 책임이 없는 적국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초반 전세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독일의 승기를 꺾기 위한 연합국의 공습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었다. 이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허용될 수 있다는 국제법의 ‘최고 비상상황(supreme emergency)’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롤즈는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해진 상황에서 드레스덴에 대한 무차별 폭격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일본의 도시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폭격과 원폭 투하 역시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Rawls 2017, 152-153).<sup>7)</sup>

롤즈는 포괄적 교리 사이의 중첩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합이 ‘단순한(mere)’ 모두스 비벤디에 비교하여 훨씬 더 안정적인 해법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모두스 비벤디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협상을 통해 도달하는 ‘균형점(equilibrium)’이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도 없고 안정적이지도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두스 비벤디는 그것이 합의되는 시점의 현실적 세력균형을 반영하지만, 만약 세력균형에 변화가 생길 경우 각각의 국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두스 비벤디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두스 비벤디는 상황에

7) 롤즈는 무법국가의 엘리트 집단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위반이나 무력공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Lefkowitz 2015, 379). 한편 롤즈는 냉전기의 대결구도 속에서 일정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무법국가들이 자유사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 매우 불안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붕괴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중첩적 합의’는 훨씬 더 강력한 도덕적 목표와 더불어 사람들의 공적 생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더 나은 조건이며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이 롤즈의 견해였다(Rawls 1999, 432-433).

결국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모두스 비벤디를 홉스적 공존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sup>8)</sup> 공통의 가치관이 없더라도 서로 공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자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이 호혜적으로 작동할 경우 모두스 비벤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포게(Thomas Pogge)도 모두스 비벤디가 다원주의에 대한 잠정적 해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모두스 비벤디가 당사자들 각자의 도덕적 관념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화적이거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모두스 비벤디의 합의는 공포와 불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나 권력균형의 변화가 생길 경우 모두스 비벤디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두스 비벤디는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권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좌우되며, 많은 경우 각국 국내사회의 압력으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고조되곤 한다. 또한 적대국 간에 모두스 비벤디가 합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도덕적 고려와 전략적 의지로 인하여 단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Pogge 1987, 430-431).

이런 점에서 롤즈의 무법국가론은 모두스 비벤디적 해법을 거부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성향과 매우 닮았다. 특히 다른 가치관을 지닌 비(非)자유주의 사회, 특히 무법국가나 불량국가를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불관용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미국 외교정책의 불량국가 담론이 궁극적으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및 만민법 사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며,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롤즈의 무법국가 개념이나 부시 행정부의 불량국가 개념은 모두 외교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를 가리키고 있다. 외교정책에서 이러한 신념체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레이건 행정부 당시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로 불

8) 홉스의 사회계약 모델에서 무제한적인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은 행위자 간에 기대하는 ‘상호 조정된 자제(coordinated self-restraint)’이다. 이러한 자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쌍방 간에 특정한 가치 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상대방의 이익, 역량,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호혜적인 행동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홉스식 모델의 특징이다(Pogge 1987, 427).

렸던 것과 같이 적대국가를 이데올로기적 공포의 근원지로 간주하려는 성향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9/11 테러 이후의 '불량국가' 담론 역시 강한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의 성격을 띠는데, 이는 롤즈가 『만민법』에서 스페인제국이나 나치 정권을 '무법국가'의 사례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Doyle 2015, 268-269).

둘째, 롤즈의 무법국가 담론은 부시행정부 당시의 불량국가 담론에 비해 한층 더 계몽적이고 세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전 자유주의의 틀 내에서 구체적인 '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역사 속의 자유주의는 본래 보편적 세계관을 지향하기보다도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정체제, 절대주의, 도그마주의 등 비판의 '대상'을 명시해왔는데, 롤즈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정권을,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 북한 정권을 그러한 대상으로 꼽고 있다(Geuss 2005, 24-25 & 34). 셋째, 부시행정부의 불량국가 개념은 롤즈의 『만민법』에서 제시한 '무법국가'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단아를 규정하는데 동조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제연합 헌장 2조와 같이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하는 경우를 '불량국가'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롤즈의 무법국가 개념에는 자국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국내정치적 기준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곧 '인권'의 문제가 불량국가를 결정하는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인데, 그 기원은 바로 롤즈의 『만민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Prebler 2005, 26-27). 결국 부시 행정부의 불량국가 담론과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담긴 자가당착적인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 정치철학 전통과 개념들 내부에 잠재된 딜레마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정치적 현실주의와 모두스 비벤디

### 1. 자유주의의 한계와 정치적 현실주의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의 마지막 이데올로기라고도 일컬어지는 자유주의가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줄어들어왔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는 설부터 판단도 있었지만, 오늘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유주의는

5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치철학으로서,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이룬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그 정당성을 구축해왔다. 그렇지만 현실의 정치는 자유주의를 기획했던 초기 철학자들이 구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으며, 자유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자유주의가 언뜻 보기에 점점 확산되고 완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주의는 스스로의 내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르고 말았다. 자유주의는 반항하는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면서 한층 더 자유주의적인 원칙과 실천을 강요하려 하기 때문이다(Deneen 2019, 21-24).

자유주의의 종말을 진단하는 학자들은 공산주의의 종말이 자유주의의 동반 쇠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공산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근대 계몽주의 기획의 산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만을 그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는 현실정치와 부합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반자유주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강화해왔으며, 유토피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휘두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보수주의 물결과 세계화, 종교적 근본주의는 모두 계몽주의 정신의 지나친 확장과 왜곡에 그 기원을 둔다(Gray 1995, xiv-xvii). 이러한 계몽주의의 병폐에 대하여 세계 곳곳에서 특수주의, 호전적 종교, 인종적 편향성 등의 반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현실의 국제정치가 다원주의 성향을 강화해가고 있는 만큼이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강박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원주의라는 현실 정치의 조건 하에서 자유주의의 원리가 좌절했던 역사적 경험은 바이마르(Weimar) 공화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독일 공화국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체제를 통하여 특정한 세계관과 인간상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하였다. 당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원칙은 모든 대립적 의견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범뿐이었다. 이러한 메타규범은 롤즈가 ‘포괄적 교리’라고 불렀던 일반적인 신념체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범들의 존재와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의 규범’이었다. 바이마르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활형식으로서 자유주의는 결코 최선의 가치가 아니며, 가능한 여러 이념 중의 하나로서 단지 상대적인 것일 뿐이었다(Safranski 2017, 348-349).<sup>9)</sup>

9) 켈젠(Hans Kelsen)은 이런 점에서 형이상학적이며 절대주의적인 세계관은 귀족적인 것

이런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롤즈의 이론에 대한 자유주의 정치철학 내부의 비판과 논란은 롤즈의 위상을 재검토하는데 큰 시사점을 준다. 롤즈의 『정의론』에 이어 1998년에 발간된 『만민법』은 그의 자유주의 정치철학 기획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진영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예를 들어 포게(Thomas Pogge)나 뷰캐넌(Allen Buchanan)은 롤즈의 『만민법』이 그의 초기 정의론과 일맥상통하지 않으며, 자유주의적 원칙을 구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약자에 대한 원조 등 더욱 평등한 국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집중적 제도를 위한 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Pogge 2004; Buchanan 2000). 슈클라(Judith Shklar)와 같은 자유주의자들 역시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이 ‘공포(fear)’에 기원하고 있다는 점을 롤즈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Shklar 1989). 바이츠(Charles Beitz)와 쿠퍼(Andrew Kuper)도 롤즈가 ‘만민’ 개념에 치중하는 바람에 자유주의의 기초인 ‘개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못했으며, 특히 ‘인권’을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비판하였다(Beitz 2000, 683-684; Kuper 2000, 641-642).

한편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롤즈 이론의 범위와 성격을 재규정하려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롤즈의 자유주의 기획이 제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롤즈의 『만민법』이 충분한 국제사회의 정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롤즈의 의도가 국제사회의 기본구조를 구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 접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Freeman 2007, 455-456; Wellman 2012). 이와 더불어 롤즈의 기획이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자유주의(comprehensive liberalism)’가 아니라 ‘관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도 경청할 만하다(Tan 2000, 45). 또한 롤즈의 『만민법』이 국제사회에서 ‘이상적 사회’보다도 ‘비이상적 사회’에 관한 이론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는 시각도 호응을 얻고 있다(Nili 2010).

한편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문제점을 파고든 현실주의는 롤즈의 정의이론이나 정치적 자유주의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근본에서부터 비판해왔다.<sup>10)</sup> 즉 자유주의

---

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비판적이면서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 주장하기도 하였다.

10) 이러한 정치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이론 분야에서 카아(E. H. Carr)가 제시했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현실주의가 19세기의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대

를 한층 더 정교한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통한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현실주의는 여타의 이데올로기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파시즘 등 다양한 정치적 프로그램들이 특정한 지향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기획(programme)'인 반면, 현실주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주의는 사회 제도의 구조, 실천, 가치 등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내세우지 않으며, 오로지 현실에 존재하는 정치적 불일치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현실주의는 자유주의가 정치적 현실의 제 측면, 즉 불일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 제도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Sleat 2013, 9).<sup>11)</sup>

롤즈의 『정의론』이 정치철학의 '부활'을 상징하는 업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계몽주의 기획이 붕괴되어 가는 시점에 전통적인 정치철학의 과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Gray 1995, 1-2). 그는 칸트의 의무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주의 도덕을 새롭게 정립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현실 정치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는 전통적 자유주의자들이 '추상적 개인주의(abstract individualism)'라는 형이상학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기인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고는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탐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무엇보다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모습, 즉 '역사적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삶을 공허한 것으로 치부해온 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도덕적 가치와 포괄적 교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통약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도덕이나 정치의 이론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롤즈의 만민법과 무법국가론에 드러났듯이,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정면 대응을 주문해왔다. 자유주의의를 지키기 위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칸트가 표현한 것처럼, "굽어진 나무줄기(crooked timber)'와도 같은 인류의 다양한 삶을 '곧은 것(straight thing)'으로 만들기 위해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강압에 의존해온 것이다(Berlin 1990, 18-19).<sup>12)</sup>

---

안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며 양자 사이에 절충적인 입장을 필요하다고 보았다(Sleat 2013, 4).

11) 정치적 현실주의는 롤즈와 드워킨(Ronald Dworkin) 등 영미계의 '전통 자유주의 이론(high liberal theory)'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윌리엄즈(Bernard Williams)와 던(John Dunn), 게우스(Raymond Geuss), 그레이(John Gray) 등이 현실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Galston 2010, 385-386).

12) 베린(Isaiah Berlin)은 진리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톨스토이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진리

현실주의자들은 정치적 삶에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강압'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현실 정치의 '갈등'이 결코 제거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3)</sup>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불편부당한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정치의 본질이 '지배'에 있으며, 사회적 다양성 속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본다. 현실 정치는 결국 비(非)도덕적 과정이며, 롤즈가 제시했던 '공적 이성(public reason)'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치열한 '비(非)이성의 간계(cunning of unreason)'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Stears 2007, 540-541).

또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가치 다원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인식이 피상적이라고 비판한다. 롤즈를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은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현실 정치의 상황이 합리적 고려와 심의 민주주의적 의견 교환을 통해 공유 가치의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롤즈가 받아들였던 포괄적 교리의 다양성은 자유주의자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층적 다양성(deep diversity)'으로 간주한다(Stears 2007, 541-542). 이에 대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공적 이성'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다른 포괄적 교리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포괄적 교리를 제한함으로써 중첩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인정'과 '제한'이 사실상 하나의 '합의'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이 보기에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실천이다. 그만큼 자유주의자들이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였던 '합의'에 비하여 현실의 정치적 '합의'는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정의'의 가치가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인류 최초의 사회계약에 관한 홉스적 가상 담론은 이러한 한계를 잘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무정부상태에 처한 '최초의 인간'은 무엇보다도 질서, 보호, 안전, 신뢰, 협력의 조건을 창출하는데 노력했을 것이었다. 그 당시

---

리는 것이 그렇게 엄격하고 완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칸트의 정언명령과 같은 이상적 기준을 현실 정치에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Berlin 1990, 19).

13) 강압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던 현실주의 사고는 프리드리히 니체, 막스 베버, 칼 슈미트의 정치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코넬리(William Connolly), 무페(Chantal Mouffe), 그레이 등 자유주의에 비판적인 학자들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Stears 2007, 534).



에는 정의나 추상적 도덕보다도 이러한 생존지향적 가치들이 더 중요했을 터인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가치들을 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윌리엄즈는 이러한 문제, 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최초의 정치적 문제(first political question)'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권위의 '정당화(legitimation)'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Williams 2005, 3-4).<sup>14)</sup> 이러한 '최초의 정치적 문제'란 정치적 권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신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그에 대한 해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Rossi and Sleat 2014, 693).<sup>15)</sup>

이러한 속성은 정치적 현실주의가 보편적인 원칙과 도덕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본래 정치적 자유주의는 대체로 보편적 원칙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그에 부합하는 제도와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정치제도와 질서의 정당성이 그러한 원칙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주의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도와 실천이 오히려 정치적 교리나 도덕의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정치제도와 실천이 원칙을 실행하는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와 형태가 교리와 도덕의 관념을 정당화시켜준다는 것이다(Sangiovanni 2008, 137-138). 그런 만큼 정치적 현실주의는 '상황의존성(contingency)'와 '실천'에 주안점을 두면서 그동안 정치적 자유주의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현실 정치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 2. 모두스 비벤디와 실천의 정치학

이상의 논의와 같이,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주의가 현실 정치의 중요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들은 롤즈나 드워킨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고상한 자유주의(high liberalism)'로 치부하면서 유평피아

14) 정치적 현실주의자인 윌리엄즈는 사회계약의 결과로서 등장한 '국가'의 임무는 이러한 '최초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고, 그로부터 '기본 정당화 요구(basic legitimation demand)'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Williams 2005, 4).

15) 정치적 현실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집단적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당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 자유주의자들이 공적 이성과 보편적 도덕을 바탕으로 한 합의 도출에 몰두했다면, 현실주의자들은 법제도와 권위를 통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데 더 집중해왔다(Rossi and Sleat 2014, 692).

적인 생각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인간 사회에 상존하는 정치적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상시적으로 중재 또는 견제하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톨즈가 주목했던 ‘가치 다원주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며 정치적 현실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현실주의의 입장이 두드러진다. 모두스 비벤디 개념이 개인들 사이의 공존과 정치적 타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원주의, 즉 정치적 ‘불일치’에 대하여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보다는 현실주의자들이 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드러난다. 특히 모두스 비벤디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다원주의적 현실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만큼 모두스 비벤디 개념은 완벽한 포괄적 교리 또는 이상적인 합의를 지향하는 대신에 ‘평화’와 ‘안정’의 조건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의 결과이다. 달성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정의의 기준에 얽매이기 보다는, 최소한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최선의 가치’보다 ‘차선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두스 비벤디는 서로 다른 포괄적 교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합하려는 환상을 버리고 현실의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도록 도와주는 ‘정치적 기능’을 요구한다. 정치의 본질이 궁극적인 이상향을 구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갈등과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모두스 비벤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종착점일 수 있다. 정치는 ‘정의’보다 ‘질서’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정치적 기능’은 복수의 포괄적 교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 현실주의는 ‘정치’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규범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Galston 2010, 386-388).

이처럼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현실주의는 ‘모두스 비벤디’의 해법을 중시해왔다. 가치 다원주의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곤경에 처해왔고, 이를 타파하려던 톨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모두스 비벤디 개념을 통한 절충적 해법을 마련하는 작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모두스 비벤디 개념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때우려는 절충적 성격을 띤다. 또한 인간의 ‘좋은 삶’이나 절대적인 도덕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反)유토피아적’이다. 모두스 비벤디 개념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협(acceptable compromise)’에 있다

(McCabe 2010, 126). 이러한 타협을 추구하는 시민들은 그들의 정치적 삶에서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도덕 원리를 준수하기보다 안정적인 질서를 더 원한다. 포괄적 교리가 통용되는 이상적인 사회보다는 실현 가능한 '차선(second best)'의 해법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스 비벤디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포괄적 교리 사이에 불일치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Wendt 2016, 353). 보편적인 도덕 기준에 합의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도덕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sup>16)</sup>

모두스 비벤디는 결국 인간의 삶에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한계를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들 사이에 우위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어떤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곧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Gray 2000, 5).<sup>17)</sup> 왜냐하면 모두스 비벤디 개념이 정치적 현실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유주의의 가치 자체를 방기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타협을 통한 모두스 비벤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기준(minimum moral standard)'이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통치의 책임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압적이지 않은 개인의 선택 등이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한다(McCabe 2010, 138). 또한 모두스 비벤디가 자국 국민들을 잔인하고 비참하게 대하는 정권들과의 '부패한 타협(rotten compromise)'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Margalit 2010, 1-2). 모두스 비벤디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선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는 용기, 실천, 타인에 대한 동정과 같은 '보편적 선'을 추구하거나 제노사이드나 노예제도 등 '보편적 악'을 피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포함되기도 한다(Gray 2000, 8).

또한 모두스 비벤디 개념을 선호하는 현실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상황에서 도

- 
- 16) 롤즈의 관점에서는 모두스 비벤디가 전략적이고 불안정한 해법으로서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임시적인 합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대부분 모두스 비벤디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차선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도덕적 위상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그레이, 호튼(John Horton), 맥케이브(David McCabe) 등이 포함된다(Wendt 2016, 365).
- 17) 그레이의 가치 다원주의는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나 주관주의 또는 상대주의와 다르다. 호튼(John Horton)에 따르면, 가치 다원주의는 윤리적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오류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일종의 비(非)현실주의(irrealism)에 가깝다(Horton 2006, 158).

덕적 가치의 순위를 매길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선악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곧 모두스 비벤디가 완전한 도덕 기준을 전제로 하지는 않더라도 가급적 도덕적 '선'에 근접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공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Wendt 2016, 352). 결국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모두스 비벤디의 철학이 롤즈가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그렇게 권력지향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인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모두스 비벤디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상당한 수준의 성과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Westphal 2019, 3).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적 규범에 집착하기보다는 다른 규범에 속한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일정한 타협점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완벽한 일방적 만족을 추구하려 하기보다는 사회적 평화(social peace)를 위하여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롤즈가 '중첩적 합의'를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를 모두스 비벤디는 '타협'을 통해 도달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타협'은 어떤 결정 또는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원칙이나 목표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준비는 곧 자신들과 다른 신념을 가진 상대방과 공존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도덕적 타협'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타협을 통한 모두스 비벤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강압을 통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고, 순수하게 전략적인 고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Zanetti 2011, 425-426).

이런 점에서 정치적 현실주의가 내세우는 모두스 비벤디는 자유주의자들이 상정하는 타협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인 타협의 개념을 제시한다. 정치의 본질이 타협에 있다는 생각은 이미 고대로부터 지속되어온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합의(consent)'를 통하여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는 오로지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압'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sup>18)</sup>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레토릭이나 '불량국가' 담론도 이러한 '강

18) 이런 점에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롤즈의 주장이 단지 절반만 맞다고 본다(Galston 2010, 391). 합의를 통해 질서정연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동질적 집단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롤즈의 만민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무법국가'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제 또는 전쟁의 대상이 된다. 즉 이러한 무

압의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톨즈의 무법국가론조차도 '정의의 전쟁'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강제적 타협을 공공연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의 타협 개념이 얼마나 좁은 범위 내에서 규정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실 국제질서에 관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정부상태(anarchy)'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재(tyranny)'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질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합의가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유주의 레토릭을 구사하더라도 일방적인 무력행사와 강압은 국제정치의 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모두스 비벤디 개념은 그 성격상 '실천지향적(prudential)'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 포괄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강압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부과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어떻게 평화적 공존이 가능할지에 관심을 가진다. 각자의 규범들 내부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질서정연한 정치적 삶이야말로 모두스 비벤디 개념에 담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모두스 비벤디 사고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이론을 지향하지 않으며, 정치 '질서' 자체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불안정한 현실에서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주의에서 추구하는 모두스 비벤디의 최대 덕목이다. 모두스 비벤디가 임시변통의 가치나 도덕, 교리에 머물지라도, 그것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이성에 기반을 둔 최고의 형이상학적 가치가 아니라 안정과 평화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Sleat 2013, 95-97). 이런 점에서 국제정치의 자유주의적 불량국가 담론이 가진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것은 서로 다른 포괄적 교리의 공존을 추구하기보다 포괄적 교리의 비대칭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강압'의 외교정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모두스 비벤디의 국제정치적 함의

자유주의의 가치는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유럽 대륙 내에서만 통용되어온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조는 근대 후기에 들어와 제국주의적 팽창과 함

---

법국가를 대하는 데 있어 '강압'만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

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다른 삶'의 방식을 자유주의에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지만, 자유주의 세계관은 유럽과 비유럽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 채 이분법적 논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곧 유럽 중심의 자유주의 철학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20세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냉전 이후의 국제정치 공간이 확장되고 삶의 다양한 방식을 인식해야 한다는 '다원주의'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논리에도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과 불량국가 담론이 국제사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은 이러한 정치질서의 변화에 기인한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대한 자유주의 진영의 '현실정치적' 대응이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세계가 요구하는 다원주의 시대의 삶을 규정하는데 충분한 해답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탈냉전기 국제정치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제3세계 국가들과 탈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비(非)서구국가들로 인하여 더 이상 자유주의가 '문명표준'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자유주의의 적극적 '재(再)이론화'의 산물이었지만 탈냉전기의 국제정치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질서정연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강압적 대응을 정당화함으로써 이론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기 시작한 모두스 비벤디 개념은 자유주의자들이 처한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고 현실주의자들이 도모했던 안정과 질서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해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개념적 논의가 주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정치적 자유주의자들도 모두스 비벤디의 가치를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차이는 모두스 비벤디가 얼마나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실 롤즈는 모두스 비벤디를 마키아벨리식의 타협, 즉 권력정치와 이해관계의 산물로서만 인식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의 지적처럼 우리가 완벽한 도덕적 기준보다 현실의 안정과 평화를 더 중시한다면, 분명 포괄적 자유주의나 정치적 자유주의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현실주의는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적 도덕 기준, 즉 '옳음(right)' 대신에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질서와 평화, 안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 좋음(good)'의 가치를 더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상은 과거에 비해 '온건한(modest)' 것이어야 하고 규범적으로 '제한적(limited)'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Horton 2006, 156; Gray 2000, 2). 물론 모두스 비벤디의 형식과 내용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적 효율성과 정당성은 오로지 그것이 작동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롤즈는 이러한 '상황의존성(contingency)'으로 말미암아 모두스 비벤디가 언제든 위태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성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라는 현실주의의 주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모두스 비벤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의 본래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주의자들은 모두스 비벤디가 자유주의의 추상적 원칙에 비하여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경우 보편적 권위에 대한 신념을 지향하지만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모두스 비벤디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당성과 안정성이라는 정치적 삶의 조건을 충족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Gray 1998, 33). 그렇다면 탈냉전기의 자유주의적 '불량국가' 담론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준에 얽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규범체계에서 벗어난 국가들을 혼내고 가르쳐야 한다는 일종의 가부장적 환상에 빠져 있다. 국내정치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룩해온 성과를 국제정치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드러난 이러한 간극에 대하여 충분한 정치철학적 성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국제질서에서 혼란을 제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모두스 비벤디의 논의는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eitz, Charles. 2000. "Rawls's Law of Peoples." *Ethics* 110(4), 669-696.
- Berlin, Isaiah. 1990. *The Crooked Timber of Humanity: Chapters in the History of Ideas*. London: John Murray.
- Buchanan, Allen. 2000. "Rawls's Law of Peoples: Rules for a Vanished Westphalian World." *Ethics* 110(4), 697-721.
- Caprioli, Mary and Peter Trumbore. 2005.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9(5), 770-791.
- Deneen, Patrick. 2019[2018]. *Why Liberalism Failed* 이재만 옮김.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서울: 책과함께.
- Doyle II, Thomas. 2015. "When Liberal Peoples Turn into Outlaw States: John Rawls' Law of Peoples and Liberal Nuclearism."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11(2), 257-273.
- Freeman, Samuel. 2007. *Rawls*. London: Routledge.
- Galston, William. 2010. "Realism in Politic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9(4), 385-411.
- Geis, Anna and Carmen Wunderlich. 2014.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Comparing the Notions of 'Rogue' and 'Evil'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51(4), 458-474.
- Geuss, Raymond. 2005. *Outside Eth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ay, John. 1995. *Enlightenment's Wake: Politics and Culture at the Close of the Modern Age*. London: Routledge.
- Gray, John. 1998. "Where Pluralists and Liberals Part Compan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6(1), 17-36.
- Gray, John. 2000. *Two Faces of Liberalism*. New York: Polity.
- Homolar, Alexandra. 2010. "Rebels without a Conscience: The Evolution of the Rogue States Narrative in US Security Polic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7(4), 705-717.
- Horton, John. 2006. "John Gray and the Political Theory of Modus Vivendi."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9(2), 155-169.
- Kuper, Andrew. 2000. "Rawlsian Global Justice: Beyond The Law of Peoples



- to a Cosmopolitan Law of Persons." *Political Theory* 28(5), 640-674.
- Lefkowitz, David. 2015. "Just War Theory." In *The Cambridge Rawls Lexicon* edited by Jon Mandle and David Riedy, 377-38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galit, Avishai. 2010. *On Compromise and Rotten Comprom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tin, Rex. 2015. "Overlapping Consensus." In *The Cambridge Rawls Lexicon*, edited by Jon Mandle and David A. Reidy, 588-5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be, David. 2010. *Modus Vivendi Liberalism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re, Matthew. 2009. "Pluralism, Relativism, and Liberalism."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2(2), 244-256.
- Nili, Shmuel. 2010. "A Poggean Passport for Fairness? Why Rawls' Theory of Justice Did Not Become Global." *Ethics and Global Politics* 3(4), 277-301.
- O'Reilly, K. P. 2007. "Perceiving Rogue States: The Use of the 'Rogue State' Concept by U.S. Foreign Policy Elites." *Foreign Policy Analysis* 3, 295-315.
- Pogge, Thomas. 1987.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Modus Vivendi."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81, 426-439.
- Pogge, Thomas. 2004. "The Incoherence Between Rawls's Theories of Justices." *Forclan Law Review* 72, 1739-1759.
- Preble, Christopher. 2005. "The Bush Doctrine and 'Rogue' States." *Foreign Service Journal* (October), 25-30.
- Rawls, John. 1999[1987]. *Collected Papers*. Edited by Samuel Freem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2016[1993].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옮김. 『정치적 자유주의』. 파주: 동명사.
- Rawls, John. 2016[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김주희 옮김.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울: 이학사.
- Rawls, John. 2017[1999]. *The Law of Peoples*. 장동진·김만권·김기호 옮김. 『만민법』. 파주: 동명사.

- Rorty, Richard. 1991.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Philosophical Papers*, Volum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si, Enzo and Matt Sleat. 2014. "Realism in Normative Political Theory." *Philosophy Compass* 9/10, 689-701.
- Safranski, Rüdiger. 2017[1994]. *Ein Meister aus Deutschland Heidegger und eine Zeit*. 박민수 옮김. 『하이데거』. 서울: 북캠퍼스.
- Sangiovanni, Andrea. 2008. "Justice and the Priority of Politics to Morality."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6(2), 137-164.
- Shklar, Judith. 1989. "The Liberalism of Fear." In *Liberalism and the Moral Life* edited by Nancy Rosenblum, 21-3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leat, Matt. 2013. *Liberal Realism A Realist Theory of Liberal Politic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tears, Marc. 2007. "Review Articl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Compuls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533-553.
- Tan, Kok-Chor. 2000. *Toleration, Diversity, and Global Justice*.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Wellman, Christopher. 2012. "Reinterpreting Rawls's The Law of Peoples."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9(1), 213-232.
- Wendt, Fabian. 2016. "The Moral Standing of Modus Vivendi Arrangements." *Public Affairs Quarterly* 30(4), 351-370.
- Westphal, Manon. 2019. "Theorizing Modus Vivendi." In *The Political Theory of Modus Vivendi*, edited by John Horton et al. eds., 1-27. Cham: Springer.
- Williams, Bernard. 2005. *In the Beginning Was the Deed: Realism and Moralism in Political Argu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anetti, Véronique. 2011. "Justice, Peace and Compromise." *Analyse and Kritik* 2, 423-439.

Abstract

## Political Liberalism and Modus Vivendi: The Discourse of Rogue St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Byoung Won Min ■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impacts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al philosophy have on the discourse of rogue states. Its focus is on how liberalism has revealed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at kind of problems liberalism has in its internal logic will also be discussed in terms of its relations to the discourse of rogue states. The eclectic solution of the modus vivendi will be introduced on the comparison of political liberalism and political realism. Some historical background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fundamentals of political liberalism are to be presented in the first section. Then follows limits of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challenges of political realism regarding the concept of modus vivendi, with some final comments on the implications of modus vivendi for the liberal discourse of rogue states.

Key Words: Political Liberalism, Political Realism, Rogue States, Modus Vivendi

